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주거계획

서 의 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장,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2003년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역량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근거로 2004년 한 해 동안 관련 사업계획수립이 진행되던 중 현재의 위헌결정에 의해 정부의 노력들은 잠시 중단되는 듯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근본취지는 국가의 중추기능은 서울에 남고 행정기능의 일부만을 옮기는 것인바, 해당 지역은 충남 연기·공주 일대이지만 그 효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전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5년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를 통해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일정으로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계획목표년도 2030년까지 전체 추진일정을 준비단계, 계획단계, 건설단계, 이전단계 등 4단계로 설정하여 그 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는 계획단계에 해당하며, 2005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전체 계획부지에 대한 용지매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2006년 7월과 9월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내용이 각 공청회를 이미 거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과정 중에 있고, 2007년 중반까지는 실시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어 본격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목표 연도 2030년까지는 행정기관 종사자 및 전체 주민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도시수준 향상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건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본 도시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모든 관련 정책들 가운데 가장 아이콘(icon)적인 사업입니다. 서울과 기타도시들과의 관계와 같이 한 거대도시가 대부분 도시의 기능과 인구를 흡수해버리는 기형적 국토구조가 아닌, 다극 분산형 국토구조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목표년도가 20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고, 또 세계에서 21세기 최초로 건설되는 신행정도시이므로, 때에 맞추어 미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살려보자는데 그 건설의 취지가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기본 컨셉과 철학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란 표현은 조화롭고 평등한 민주도시, 일반 시민중심의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개방된 도시, 환경

이 중요시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편 ‘잘’의 의미는 모든 활동이 매우 편리한 선진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래서 얘기꺼리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고 또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국민통합의 결여와 국가경쟁력의 소실 등이 초래되어 왔다는 전제된 공감대 위에, 정부가 직접 선도적 입장에서 국가의 중핵적 위치에 국가행정의 중심을 정하고, 각 지방에 분산·입지하게 될 혁신도시들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도시를 계획하는 시초의 과정에서 개발단계 설정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년 이상의 워낙 긴 기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해놓은 상태에다가, 토지이용,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방재 등 총 12개 이상의 개별 부문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상호 피드백이 되도록 계획내용이 수립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관련 기관들 끼리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개발단계 설정의 기초 이정표가 될 만한 몇가지 일정들, 즉 첫 마을 입주시기라든지, 적정한 토지보상 일정 등을 잘 고려하여 전체적인 도시개발 과정을 3단계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목표 연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기간을 3등분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초기 활력 단계’로 보고, 초기 이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로 이루어져 약 15만의 초기인구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족적 성숙단계’로 보고, 주요 도시 기능들이 초기정착에 성공하여 주변지역의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최고 약 30만 가량의 인구정착을 유도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부터 203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혁신거점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혀 계획목표인구 50만인이 거주하는 성숙된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인구를 50만인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더 많은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미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이미지 및 물리적 용량의 한계, 즉 토지면적, 녹지율, 계획용적률 등을 볼 때, 인구 50만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심했던 내용이 바로 어떤 도시기능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었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의 목표와 건설이념과도 직결되는 내용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인 ‘복합적’ 도시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세상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은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복합’이란 단어를 특별법 상의 도시명에 붙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도시자족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1기 신도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침상도시화(bed town), 즉 도시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공급할만한 도시의 기초기능을 갖추지 못해, 결국은 인근 모도시에 기생하는 형식의 기형적 신도시 개발의 양산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시가 자족적이라면 도시 하나만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도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국 혁신도시를 묶는 중핵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으로 볼 때 본 도시의 고립화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기에 자족성과 연계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깊은 고민의 과정이 숨겨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상 행정중심복합도시의 6개 주요기능을 ‘중앙행정’, ‘도시행정’, ‘문화 및 국제교류’, ‘첨단지식기반(산업)’, ‘의료·복지’, 및 ‘대학·연구’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중앙행정기능은 국가중추적 행정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도시행정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나의 지자체로서 관할하는 의미의 행정기능을, 대학·연구기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대학기능과 함께 대전지역 연구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R&D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

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전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집중 배치될 것입니다. 한편 첨단지식기반 기능은 기존 연기·공주지역에 이미 위치한 월산공단 종전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형 무공해 첨단산업의 역할을 담당하여 취업인구 유발효과에 한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복지기능은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인구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오송·오창지역의 BT클러스터와 연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기능들의 6개 허브는 각각 하나씩의 지역생활권을 형성하여 전체 도시에 입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체 도시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되는 주요 도시기능들이 어떤 도시전체의 열개 속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도시 전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열개 설정을 위해,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설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국제현상공모까지 실시하여 전 세계 도시 및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열개에 직접 반영된 당선안은 스페인 건축가 오르테가(Ortega)의 ‘천의 도시(A City of Thousand Cities)’ 개념과 스위스 장 페레(Jean Pierre)의 ‘궤도형 도시(The Orbital Road)’ 개념이었습니다. 이들 당선안은 모두 미래도시의 개념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의 중점 이슈로서 3가지, 즉 ‘평등’, ‘에너지효율’ 그리고 ‘경관·환경’을 중요하게 부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두개의 당선안 모두 원형의 띠모양 도시구조의 단순함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상의 세가지 이슈, 즉 미래 에너지 문제, 도시공해·환경 문제, 그리고 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환상형 도시구조를 통과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처리를 지향하여, 도시공해 및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도시 가운데에 넓은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도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확실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만끽케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발상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 도시구조 역시 이러한 구조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링으로 구성되고 그 링을 따라 대중교통중심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대중교통축을 따라 각 세부지역의 물리적 조건에 따른 거리를 두고 6개의 지역생활권들이 분산 배치될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생활권의 중심을 지나는 지점에 대중교통정류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민이면 누구든 도시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2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며, 이를 위해 기타 관련시설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6개의 주요도시기능 허브마다 각각 하나씩의 지역생활권을 형성토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생활권은 또 각각 내부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2개에서 5개의 기초생활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각 기초생활권에는 대부분 공통된 생활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크게 교육시설, 주민복합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들 복합시설들은 중앙에 공원을 통과하는 커뮤니티회랑(Community Corridor)을 따라 보행자의 편의에 부합되도록 배치될 것입니다.

행복도시의 미래주거 계획에 특징을 부여할만한 주요 이슈들은 ‘대중교통중심’, ‘이동의 편리성’, ‘생태지향성’, ‘복합화’ 였습니다.

행복도시의 주택유형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결국 현존 주거유형을 대부분 따르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즉, 고밀 주거유형으로는 판상형(또는 타워형) 집합주택과 중정형(또는 연도형) 집합주택, 중밀 주거유형으로는 근린형 주상복합 또는 타운하우스, 그리고 저밀 주거유형으로는 단독형(또는 필지형) 단독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의 주택계획을 현재 주거개념의 수준에서 수립하다보니 계획의 실제 실

현가능성, 사업성 계산,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의 측면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째, 실제로 미래주거유형을 현실화하여 계획을 수립한 신도시계획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미래지향적 계획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계획의 요소에는 그것에 관련된 선행사례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타당성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이란 다양한 부문의 전문분야가 만나 구체화되는 영역입니다. 도시문화, 생활패턴, 가족양식, 교통수단, 전기, 정보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타 모든 관련부문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어느 한 부문의 미래모습에 대한 부적응이 발생한다면, 자칫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거지는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덩치 큰 고물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마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 주거지의 실현가능성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정보통신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잣대로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정보통신(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이 우리의 미래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우리 주거양식 안에 스며들어(embeded)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아예 도시라는 삶의 양식 자체가 필요없는 완전 분산형 정주환경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또, 주택과 사무실의 구분이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집 자체가 이동수단과 결합된 유목민적(Nomadic)형태를 보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하나의 패키지화된 이름으로 우리네 삶에 다가오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과 물리적 주거환경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로, 사업성 예측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미래도시의 주거유형에 관하여는 전문분야건 실무분야에서건 간에 합의되어 제도 또는 실무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주거형태가 아직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발·계획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재정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업성이 예측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유형 제시는 참으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거리보다 상당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생되어질 도시계획·개발 분야에서 미래도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현재 주거유형만을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주거 유형제시가 한계를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전문분야와는 달리, 특히 주택은 본질상 그 양식과 구조가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에게는 도전적 과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일본의 이와 같은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지난 세기동안 그리고 최근까지 일본의 주거양식은 크게 변화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주거양식은 그 형태의 발전이나 차별화보다는 질적 또는 기능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학문과 기술영역의 상보적인 통합을 통한 어울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도시의 주거계획은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의 메카니즘만 해결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부문 전문가가 일반 시민들의 달라진 생활방식과 주거에 관한 실

제적 Needs를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분야의 전통이론 내지는 기술양식만을 고집한다면 그 도시는 시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실패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의사소통, 정부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미래주거문화 창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미래주거에 관한 몇가지 한계상황들로 인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거계획에 있어 주거유형에 관한 계획은, 일단 1단계에 해당하는 2015년까지는 기존 주거유형을 대부분 활용하여 단계별 주거수요, 즉 주거지 면적, 주거지 호수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발단계의 주거지 및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미래 주거양식 및 주거지 변화양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특성을 이미지메이킹 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몇 가지 주요 계획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에서는 주거지복합화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이자 외적인 원인들에 의해 주거지를 복합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된 것입니다. 주거용지 순밀도를 300인/ha을 목표로 하면서도 전체 개발대상지 대비 공공공지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다보니, 나머지 도시기능들의 유입을 위한 개발가능지의 면적이 이전의 도시들보다는 상당히 제약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이동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결형 주거지개발을 선호하다보니, 아무래도 대중교통 결절점에 도시복합기능이 함께 하게 되어 주거와 복합기능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는 사회통합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데, 기능복합화를 통해 여러계층의 시민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기능들을 복합화된 공간에서 사용하다보면, 동선의 점점 다양화를 통한 접촉의 기회가 잦아져 계층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복합화는 평등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가능한 한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있게 도시기능들이 배치되고 그 접근성이 균형있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복합화가 진전된다면 도시기능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거지와 연계된 도시기능의 복합화에도 모든 것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근린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을 연계하여 복합화 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즉 도시기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편의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인접배치하는 한편, 부조화 기능간에는 이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현 계획안에는 두개 이상의 학교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입지시키거나, 근린도서관, 근린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과 복합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활동간 연계성이 깊고 관리주체가 동일 하므로 시설통합화가 환영받는 것입니다. 반면, 아동관련 복지시설과 노인관련 복지시설은 분리배치 및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아동과 노인 계층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치 않고 다양한 부작용 등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 경향 등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사람도 늙으면 애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노인과 아이는 서로 경쟁관계가 설정 되는가 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래도시라고 해서 단순히 모든 기능의 상호 복합화는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와 고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런 점에서 이후의 기타 신도시들의 개발계획 내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얘기를 좀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거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결론부분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표와 건설이념에 이미 사회통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민총화를 위한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공간에 투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적 고려요소로서 사회계층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들과 같이 소득, 배경, 교육수준, 연령, 출신지역, 정치적 신념 등에 따라 지역이 나뉘지고, 또 같은 도시 안에서도 거주지역이 누가 봐도 구분되는 그런 사회는 앞으로는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서 사회계층 통합의 문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의 기본방향은첫째, 임대·분양 단기간 그리고 저소득층·중상류층의 교류 증진을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각중인 방안은 지역중심 지향적 차보행자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가능한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주거단지 입지에 있어서도 분양임대단지 및 저소득층·중상류층 주거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위해 시각적으로나 동선에 있어서도 골고루 섞어 배치할 계획입니다. 각 주거블럭 내에도 명확한 중심지구 조성 및 중심지구내 광장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부근에 상업시설 배치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대부분 주거블럭 내부의 자칫 무시되기 쉬운 상세계획 쪽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사회계층 통합의 기반형성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더 많은 방안 모색을 통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계층의 시민이 비슷한 유사공간에 모여사는 것이 왜 안 좋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한국의 현재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랄지, 그 분위기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존재의 목적으로 비춰볼 때, 사회계층의 통합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 어떤 도시의 어떤 지역에서 사회계층이 통합이 유효한 접근방법인지, 또 계층간 클러스터링이 유효한 접근방법인지는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겠고, 정부의 국토정책 과정의 흐름과도 상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편,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출현에 따른 연령계층별 사회적 혼합 역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당연히 되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노인층은 농촌이나 생태적 자연환경 속에서의 주거환경을 선호하고, 젊은 층은 도시를 선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노인층의 사고방식이 현대의 노인층과는 달라져 가고 있고, 젊은 층의 그것역시 과거와는 또 달라지고 있어, 이제는 연령대만 가지고 그 연령층에 맞는 도시를 계획한다든지 주거지계획을 지속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큼니다. 예로, 요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소일하기 보다는 바쁘게 일하기를 원하고, 활동이 불가능해져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가능한 한 수도권 인근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젊은 층 역시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획일적 대중문화와 회색도시 배경의 주거환경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웰빙, 신도시의 대도시와 다른 여유로운 주거환경 등에 눈을 떠가고 있어서 여유만 있다면 도시보다는 신도시 또는 생태적 환경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연령대에 따른 사회계층 혼합이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계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주거유형계획을 적

극적으로 고려하고, 노령인구층과 젊은 세대간의 독립과 융합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건축적, 단지적 배치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주거유형의 가변적 실구성 계획이라든지,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지 블록 내의 부대 복리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공간 계획을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거양식에 관하여는 ‘친환경’, ‘첨단정보’, ‘에너지효율’, ‘타 기능과 복합화’, ‘이동수단과의 연계화’, ‘소유보다는 사용의 개념화’, ‘넓이의 우위보다는 편리성·기능성의 우위’ 등의 경향이 점점 짙어져,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물리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래 주거에 관한 기술발달의 전개과정 그리고 일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개방향 두 가지를 항상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여기 계신 주거학회 원 및 관련 전문가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 참고문헌

1.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계획보고서 / 국토연구원
2.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계획 공청회 보고서
/ 국토연구원
3.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거부문 전략연구 최종보고서
/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